

우리가 만드는 교육대통령
대선후보 교육공약 대토론회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

우리가 만드는 교육대통령

대선후보 교육공약 대토론회

2012년 11월 21일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

우리가 만드는 교육대통령

대선후보 교육공약 대토론회

우리가 만드는 교육대통령

대선후보 교육공약 대토론회

2012년 11월 21일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

「“우리가 만드는 교육대통령”

대선후보 교육공약 대토론회」

□ 행사개요

- 일시 : 2012. 11. 21(수) 14시 - 17시
- 장소 : 서울시 의회 별관 대회의실
- 주최 :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

□ 토론회 순서

☞ 여는 마당(14:00~14:20)

1. 인사말
2. 2013교육희망대행진 - 전국 순회 원탁토론회 결과 발표

☞ 1부. 대선 후보 교육공약 발표(14:20~15:10)

- 김재춘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행복교육추진위원
-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교육정책팀장
- 조영달 -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 교육정책팀 총괄팀장
- 손우정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후보 교육정책자문위원
- 강원모 -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통령후보 교육정책전문위원

☞ 2부. 대선 후보 교육정책 분야별 비교 분석 및 제안(15:10~16:00)

- 고등교육정책 (강남훈 교수노조위원장 / 조희연 민교협상임의장)
- 유치·중등교육정책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
- 교육복지정책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사립학교정책 (윤지관 사학국본 연구위원장)
- 『2013~17 교육대개혁 프로젝트』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3부. 종합 토론(16:00~17:00)

목 차

☞ 1부. 대선 후보 교육공약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교육공약---8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교육공약---15
-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 교육공약---22
-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후보 교육공약---34
-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통령후보 교육공약---62

☞ 2부. 대선 후보 교육정책 분야별 비교 분석 및 제안

- 고등교육정책---76
- 유초중등교육정책---98
- 교육복지정책---110
- 사립학교정책---118
- 『2013~17 교육대개혁 프로젝트』---126

1부

대통령후보 교육공약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교육공약

기다려온 변화, 박근혜가 바꿉니다

교육정책 발표문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육에 대한 비전과 약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학습을 통한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꿈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몰두의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의 교육현장에 행복이 넘치고,
학생들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지나친 경쟁과 입시위주로 변질되었습니다.

학생은 성적 때문에,
학부모는 사교육비 때문에,
교사는 무너진 교권 때문에 모두가 불행합니다.
여기에 학교폭력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오히려 계층이동의 기회를 막고 있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교육 시스템도 미흡합니다.

국민 여러분,
교육은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동시에 국가의 미래인재를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이야말로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를 꿈꾸게 해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몰두를 하면, 수월성과 형평성이라는 교육의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입시위주 교육에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째,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 기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기회를 주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육의 경쟁력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많은 외국학생들이 유학을 올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100세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체계를 만들어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연령대에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 박근혜가 바꾸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다음 여덟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학입시에 휘둘리는 초중등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서, 학교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진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중학교 졸업 전까지 다양한 진로 및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능력,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체능교육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1인 1예술과 1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예·체능교육을 학교가 책임지고 모든 학생에게 제공해서 예체능 사교육비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학교폭력 방지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상담치료 과정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교원을 확충하고,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지원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인생 디자이너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수가 많으면 학생 한명 한명의 꿈과 끼에 맞는 교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수준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너무나 많은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학교교육 통계관리 및 활용' 방안을 입법화하여 통계·조사관련 공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개별 학교에는 교육지원과 행정잡무를 담당할 교무행정지원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대입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 대입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를 대폭 단순화하겠습니다.
현재 대학전형의 수가 무려 3,000여개에 달해서 입시전문가도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수시는 학생부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수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수시전형에서도 수능등급 자격요건을 두지 않도록 대학을 설득하고, 대학도 주요 대입전형계획을 변경할 때, 3년 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한국형 공동원서접수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한 번만 원서접수를 하게 되면, 원하는 여러 대학에 자동으로 지원하게 되는 선진국형 대입지원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수능과 논술시험을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여,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교과서의 혁신이야말로 교육 개혁의 시작입니다.
교과서만으로도 학교의 기본 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과별 최고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재미있고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를 개발하겠습니다.

EBS 방송을 태블릿 PC나 스마트 패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공교육비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도 낮추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대학의 회계투명성을 확대하여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다섯째,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취업지원시스템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 특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지역단위 특성화, 학문단위 특성화 등을 추진하여 특화된 대학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지방대학을 권역별로 특성화해서, 전문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해서 OECD 평균 수준인 GDP대비 1% 수준까지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별로 학생들의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지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여섯째, 학벌사회를 타파하여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스펙을 쌓기 위한 공부와 취업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함으로써 불필요한 교육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하여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290여개가 개발되어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출신학교나 지역에 관계없이 직무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차별받지 않도록 직무
능력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직무능력평가제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준공기업 및 민간으로 확대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일급제,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산업별 전문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전문대학에 진학하고 싶어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체제를 내실화하고 전문화하여,
일찍부터 자신의 꿈과 끼를 살려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로 만들겠습니다.

대학을 안가도 대접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고졸 취업자에게 추가적인 학습기회를 드리기 위해
원하는 사람은 100% 학위 취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비 해외 유학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능·기술 보유자,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기술 명장 대학원'과정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덟째,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인생후반기 제2의 직업생활 및 행복한 여가를 위해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은퇴 이후 중고령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이버세상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친화형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해서,
자신의 축적된 전문성과 인생경험을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에 대한 비전과 실천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교육은 최고의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입니다.

오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교육,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행복한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17일, 대구 동구 안일초등학교)

국민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

<'국민명령 1호' 교육 부문 제안에 대한 대답>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후보 문재인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정책 제안을 받는 '국민명령 1호' 캠페인을 마감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과 관련한 정책이 400건이 넘었습니다. 학교 폭력과 왕따, 청소년 자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힐링교육위원회, 대학 등록금 정상화 방안 등 우리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걱정과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왜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입시와 사교육으로 인한 고통, 학교 폭력·왕따·자살 등 심각한 인성 붕괴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며 국가가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선 이 요청에 대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치원, 초등 저학년에 집중 투자하여,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함께 교육의 출발선이 달라져 빈곤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0~5세 아동의 무상보육·교육을 실현하고 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학전 1년의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초등 1-2학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축소(여건이 어려운 경우 보조교사 투입)하여 섬세한 돌봄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초기단계의 학습 결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제개편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아기 학습의 중요성,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발달 등을 감안하여 취학연령 단축, 유치원 1년 의무교육, 초등학교 5년 단축 등 현행 6-3-3-4 학제를 선진 교육형 학제로 바꾸자는 요구가 많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경기도 등에서 시작된 혁신학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서 학교를 바꾸겠습니다.

선생님의 열정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수업혁신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혁신학교는 학급당 25명 이하로 하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공교육 혁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교육은 혁신학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교육 유발원인을 제거하고,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유, 초등 선행학습 사교육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막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중·고등학생보다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또한 조기 영어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증상인 '틱'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 후보 이전에 한 부모로서, 우리 사회의 한 어른으로서 가슴 아팠습니다. 유·초

등학생들의 사교육이 거의 아동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칭)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 성장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일몰 후 사교육 금지, 연령별 학습시간 기준과 적절한 휴식, 문화활동에 대한 권리기준을 제시하여 초등학교까지는 예체능 이외의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막자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표집조사로 전환하고, 교사별 평가를 도입하여 획일적 시험을 없애겠습니다.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여 유·초등 단계 사교육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지는 에듀케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 해체와 맞벌이 부부 증대, 마을공동체의 해체 등으로 아동에 대한 돌봄이 더욱 절실합니다. 학교가 이제 단순하게 지식을 전수하는 곳을 넘어서, 돌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3분의 1이 방과후에 나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재능있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엄마처럼 돌보겠습니다. 다시는 통영의 한아름양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아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급회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 문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등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시도 단위로 설립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관·문화의 집·청소년상담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연계된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 5일제 시행으로 학생들은 연간 175일을 학교 밖에서 생활합니다. 지역사회의 도서관, 박물관, 문화예술공간 등을 우리 아이들에게 활짝 개방하게 하여 학교 밖 학습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임기 중에 '작은 도서관 4000개 만들기 정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독서와 문화활동, 만남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직속으로 힐링교육위원회(국민제안 사항)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교육과 돌봄이 결합된 에듀케어 시스템이 '마을교육공동체'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쉽표가 있는 교육 -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시행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빈번하고, 신체적 정서적 전환기인 중학교 2학년 시기에는 1년 내지 최소 한 학기 동안 통상적인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쉽표가 있는 교육 - 행복한 중2 프로젝트'를 시범·운영하여 확대시키겠습니다.

모든 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운영되어 정상화되면 행복한 중2프로젝트는 정규교과 과정의 적성·진로 찾기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서열화체제를 해소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최근 사교육 경쟁이 중학교를 지나 초등학교 유아교육까지 과열되는 주된 원인은 고등학교가 일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 된 데

있습니다. 저는 고교 서열화 체제를 해소하여 초,중학생의 사교육 경쟁을 근원적으로 줄여가겠습니다.

설립 취지에서 어긋나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가 특권화된 교육코스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학입학 전형에서도 일반고를 차별하는 소위 고교등급제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함께 점진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다양한 수월성이 키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특성, 학력 편차를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어, 한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선택권과 수월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혁신고등학교와 결합해 좋은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학교별 특성화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다른 학교에서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원하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 개선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겠습니다.

대학입시 개혁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있었고 요구도 뜨거웠습니다. 교육 정책에서 대학입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근본적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대학입시 제도 등 중장기과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2014년 대입개편안이 공고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대입체제 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제안을 최대한 수렴하는 개선안을 낼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째, 현재 3,289가지나 되는 복잡한 대학입시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습니다. 국민제안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했던 트랙별 인원할당제, 즉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습니다. 수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회균형 선발에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회균형전형 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내 선발로 두고(그 외는 현행대로 정원 외로 유지) 그 비율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정 기간마다 교육 및 사회상황을 점검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회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과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고교 교육과정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논술, 과도한 영어 스펙 요구의 폐해를 바로 잡겠습니다. 영어는 세계화된 언어로 학문과 생활, 국제교류에서 꼭 필요하지만, 시험용 스펙이 과다하게 요구되어 심지어는 외국에서 생활하다 온 학생들마저 영어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영어교육 정상화 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유아부터 취업까지 이명박·새누리 정권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영어 사교육의 폐해를 바로 잡겠습니다.

넷째,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고교 교육과정과 학생의 성장과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입학사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제도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

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전형의 기준이나 원칙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정한 전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신분 보장 등에 국가가 나서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에 대한 온갖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가칭)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화하여 안정적이고 점진적 개선이 가능한 입시제도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대학입학지원처를 통해 우선 대학입시전형 단순화를 추진하고 학생들이 원서를 한 번만 내도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온라인 입학지원시스템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제도의 정형화·단순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중등교육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대학입시와 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EBS에서 제공하는 유치중고교 프로그램을 전면 무료화 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국민과 정부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서 공정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교육이 다시, 우리 사회,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고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 교육공약

격차를 해소하는

창의·희망의 교육

3대 목표

1.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존중받는 교육의 실현
2. 창의와 소통과 혁신을 통한 교육체계의 개선
3.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교육격차의 해소 및 사회통합의 실현

8대 전략

1. 학벌 철폐와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 혁신
2. 창의·개성을 갖춘 공교육의 회복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3. 국가의 등록금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기회균등 실현
4. 빈곤·소외계층에게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시해 사회통합 실현
5.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6. 삶의 회복을 보장하는 평생교육체제 구축
7. 학생·교사가 중심인 스마트교육 실현
8.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전략 1. 학벌 철폐와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대학체제 혁신

< 현실진단 >

- ◆ 대학서열화와 이에 따른 입시경쟁 과열은 공교육 파행과 과도한 사교육 부담을 초래
- ◆ 지역인재의 수도권 대학 진학으로 교육격차와 국토불균형이 심각
- ◆ 극심한 학벌의식 팽배로 취업, 승진 등에서 불공정과 부정의 만연함

< 실천과제 >

-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대학육성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성 확보
 - '거점국립대학'의 지정 및 육성 : 연구분야의 특성화 및 연구중심대학원 활성화를 통하여 우수대학으로 육성
 - '특성화 혁신대학'(국/사립)의 지정 및 육성 : 교육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취업 및 창업과 연계함으로써 대학서열화를 대폭 완화
 -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육성 :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 국가에 의한 책임관리 체제 도입
- ◎ '지역고용할당제'를 위한 '균형적 고용법'의 제정
 - 공공기관에서 지역대학졸업자 채용을 유도하고, 점차 대기업과 여타 민간 기업으로 확대 적용해 인센티브 부여
- ◎ '차별금지법' 제정
 - 대학입시나 취업할 때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 출신지, 성별이나 피부색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대학이나 직장에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

< 기대효과 >

- ◎ 대학서열화 및 지역격차 해소
- ◎ 대학입시 경쟁 과열과 사교육의 성행을 막아 학부모와 학생이 교육으로 받는 고통을 획기적으로 감소
- ◎ 능력에 따라 취업, 승진이 이루어지게 하여 공정과 정의사회의 바탕을 마련
- ◎ 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해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교육의 활성화 달성
- ◎ '거점국립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국/사립)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혁신을 주도

전략 2. 창의·개성을 갖춘 공교육의 회복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 현실진단 >

- ◆ 현재는 초6, 중3, 고2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시행으로 인해, 이를 대비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교육을 파행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
- ◆ 고교 서열화, 교육내용의 획일화, 계층 간 불평등 문제의 심화와 일반고의 위기 현상을 초래
- ◆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창의성과 지속가능한 실력배양에 어려움
- ◆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넘어 출제되는 대학별고사, 수시로 바뀌는 복잡한 대입전형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 심각

< 실천과제 >

- ◎ '수평적 고교선택제'와 '자율진로탐색 교육과정' 도입
 - '선지원 후추첨' 방식 도입 :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학교의 의사에 따라 존속시키되,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고 전·후기를 통합함
 - 다양한 직업/진로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개인의 과목선택권과 학점제를 도입.
 -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취업자는 4년간 병역의무 연기제 도입
- ◎ '학교공교육지원법' 제정
 - 교사 중심의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권을 강화함
 - 질적평가 방식의 학생평가제도를 개선함
 -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여 개별맞춤교육이 가능하게함
- ◎ 국가수준 최소달성 교육목표의 실현(중기정책)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국가수준 최소달성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했는지 여부만을 판정하는 간소한 기초학력도달평가만을 실시
 - 전인적·실천 연구자로서 교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선발 체제를 개편함
- ◎ 대입전형의 간소화와 대입경쟁의 공정화
 - 대입전형의 종류와 명칭을 4가지로 간소화(수능전형, 논술전형, 내신전형, 입학사정관전형)
 - 학생부 이외의 각종 스펙자료 제출을 금지함
 -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명확히 관리함
 - '한국형입학사정관제' 도입 : 본래의 취지와 장점을 회복하고, 공공성을 높여 공교육 혁신을 유도함
 - 계층지역 등을 고려한 기회균등선발인원을 20%까지 확대
- ◎ 학원의 선행교육의 금지 대책

〈 기대효과 〉

- ◎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혁신해 고교간 차별적 관계를 해소하고 학생간 양극화를 해소함
- ◎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공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학교생활 충실도와 잠재역량 평가 중심으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함
- ◎ 기초학력 책임 교육으로 사교육 경감을 유도함
- ◎ 학생들의 자신의 관심사 몰입과 잠재력 개발을 통해 학교 내 폭력 및 왕따 현상 해소
- ◎ 교사가 교육과정의 운영과 평가를 주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충실도를 높이고, 상위극소수만이 아닌 모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 제고

전략 3. 국가의 등록금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기회균등 실현

〈 현실진단 〉

- ◆ 공공재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고, 고등교육 이상은 교육의 혜택을 받는 민간기업과 학생의 책무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현재까지 고교수업료 지원 혜택 대상에서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여전히 제외된 상태
- ◆ 세계 2위의 높은 대학등록금 수준과 대출연체로 청년신용불량자(2012년 8월, 14,360명)가 양산되고, 취업도 어려워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삶의 고통을 안겨 주고 있음

〈 실천과제 〉

- ◎ 고교 무상교육 순차적 단계로 실시
 - 기본 학교교육비(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를 포함해 교과서와 학습자료비 등을 국가가 부담
- ◎ '청년 안심등록금제'('반값등록금' + '학자금신용보증기금')
 - '반값등록금'을 국공사립 대학 모두 국가가 부담함
 - '반값등록금' 단계적 수혜 대상 : 소외/취약 계층 자녀, 전문직업대학 체제를 갖추는 전문대학(2014), 지방대 이공계 확대(2015), 지방대 전체 확대(2016), 수도권 전체 확대(2017)
 - 등록금의 나머지 부분 :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장기저리로 대출
- ◎ 대학의 재정운영에 대한 자구노력 및 기업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
 - 대학은 산학협력을 의무화하고, 기업은 대학재정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

〈 기대효과 〉

- ◎ 공공재인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함
- ◎ 고등학교와 대학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공립 및 사학의 건전성과 공공성 확보
- ◎ 대학과 산업계가 좀 더 긴밀한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해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함
- ◎ 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에 매진하도록 하여 미래 사회 인력으로서 우수성을 확보함
- ◎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돼 취업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끊어주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줌

전략 4. 빈곤·소외계층에게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시해 사회통합 실현

< 현실진단 >

- ◆ 경제적 격차(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등의 소외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점차 심화
- ◆ 취약소외집단(장애아 특수교육,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교육소외와 교육격차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복지 차원의 대응이 절실
- ◆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학교교육에 뒤처져 중도 포기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한국 사회에 동화 혹은 두 문화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 맞춤형 교육과정 신설·병행이 필요가 있음

< 실천과제 >

- ◎ 사회통합 실현 차원에서 교육복지를 지원할 관련 법 및 시행령 보완.
 - 초·중등교육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아교육법에 통합교육(특수교사양성, 진로/직업 상담, 부모교육, 등 포함)
 -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균등 입학 전형을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함
- ◎ 통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방안 마련
 - 관련 학교 구조의 변화를 위한 교육청 및 학교행정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외계층 자녀(농산어촌, 빈곤, 저소득층) 교육 대상자 등에 대한 조기 파악
 - 농어촌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작은 학교에 대한 회생책을 강구(초중등통합, 도·농간 상호협력체제 구축 등)
- ◎ 맞춤형 균형 교육복지 교육프로그램 구축
 -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 구축
 - 소셜미디어 활용 포함한 다문화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다문화 가정 학생과 미등록이주 학생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내용을 개선함

< 기대효과 >

- ◎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기회평등을 실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 ◎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아시아지역 교육·문화를 리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 교육복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확대함

전략 5.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 현실진단 >

- ◆ 승자독식의 경쟁, 물질만능주의, 공정한 과정을 무시한 목표달성 추구 등의 사회문화를 인성·사회적 가치·삶의 여유 등을 지향하는 문화로 전환이 시급
- ◆ 중학교 학생들의 정체성 미확립과 성적저조로 인해 폐배감이 만연함
- ◆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 최근 1년 간 피해율(18.3%), 가해율(15.7%)
- ◆ 최초 학교폭력 피해 경험연령이 낮아지고 학교폭력이 집단화하는 경향을 보임
- ◆ 학교폭력이 휴대폰 문자, SNS 등을 통해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 청소년 자살률 증가. 15~19세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 실천과제 >

- ◎ 폭력과 자살 예방을 위한 학교와 가정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전반적인 연계 대책 마련
 -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아닌, 개인·가정·학교·사회구조와 문화 및 가치관 등 유기적 관계에서 풀어야 함
 - 공적 가치 (자유, 평등, 박애, 공정, 공공 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비폭력 평화인권교육 강화
 -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 학교 내 '소통과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 마련과 관리 대책 마련
 -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문화정착을 지원함
 -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관계 회복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
 - 폭력가해자에 대한 학적부 기록을 징벌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함 (졸업 시 삭제)
 - 초·중학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위기학생 지원 시설을 운영함
 - 교사양성프로그램 개선과 집중연수를 통해 교사의 상담과 직무역량을 강화함
- ◎ 학교 안팎 연계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청소년지원센터를 확대함
 - 학교관리자와 교사·학부모·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함
 - 긴급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함 (경찰,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등)

< 기대효과 >

- ◎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전과 평안을 주는 학교 문화가 정착됨
- ◎ 예방·대처·회복 관련 일자리가 창출됨
- ◎ 지역사회 공동네트워크 구축으로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는 등 사회통합 효과가 있음

전략 6. 삶의 회복을 보장하는 평생교육 체제 구축

< 현실진단 >

- ◆ 노인인구 비율이 11%(2010년 기준)에 이르렀으나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율과 참여 프로그램의 수준은 매우 낮은 편임
- ◆ 2011년 평생학습참여율은 32.4%로 대학진학률의 절반도 안 되며, 대학진학률보다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낮음

< 실천과제 >

- ◎ '시민개방대학' 운영
 - 기존 전문대학 중 일부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함
 - 대학·민간 평생교육기관이 MOU를 맺어 다양한 기관의 이수 학점을 통합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함
- ◎ 온·오프 연계 평생학습체제 및 N-스크린형 평생학습체제를 구축
 -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확대·강화로 개인 맞춤형 평생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함
 - 인터넷 기반 EBS 방송을 활용함
 - 평생학습 교육과정 : 직업노동교육, 평생교육, 영어학습, 부모교육, 예비부모 교육과정을 개설함
- ◎ 100세 시대를 위한 '제3세대 대학' 설립
 - 은퇴자 취업교육, 노년기 인문교양교육 및 재무설계교육, 취미교양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함
 - 기존 평생교육시설, 노인대학, 방송통신대 평생학습관 시설을 적극 활용함
- ◎ 교육·복지·일자리의 융합적 전략으로 교육불안을 해소
 - 지역거점대학 및 특성화 혁신대학, 청년안심등록금제, 지역고용할당제, 균형적 고용법 등의 연계 체계 강화
 - 직업진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교육, 취업상담 및 알선 지원 서비스 업무를 일원화한 (가칭)'취업능력개발 교육지원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 ◎ 국민들의 사회 적응성과 직업선택기회를 확대함
- ◎ 학교교육에서 배제된 학생을 조기발견하고 교육청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책임교육을 강화함
- ◎ 모든 계층(주부, 노년, 근로취약계층, 해외한인교포 등)이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주기와 친화적인 평생교육체제가 구축됨
- ◎ 교양 차원의 교육을 넘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기를 제공함
- ◎ 소셜네트워크나 PC를 활용한 스마트교육 방식으로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전략 7. 학생·교사가 중심인 스마트 교육 실현

< 현실진단 >

- ◆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공교육에 접목시키려는 의지와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생과 교사에 의한 활용이 적어 예산 낭비를 초래함 (예 : 에듀넷, 초·중·고 'CD 전자 교과서' 등)
- ◆ 관 주도적인 하향식 스마트교육 정책의 수립과 진행이 불러 오는 폐해가 큼
- ◆ EBS-수능연계 출제(70%)로 인해 교사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고 교과서가 외면당하며, 수업이 문제풀이식으로 전락함

< 실천과제 >

- ◎ 관 주도의 하향식에서 학생·교사가 중심인 창의·통합형 스마트교육으로 전환함
 - 문제해결형 논술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식 운영에 필요한 교사의 역량을 강화함
 - 온라인기반 지식 커뮤니티에서 루브릭 평가지표의 공동개발을 지원함
 - 외부 환경의 변화(예: 태블릿 PC의 보급, SNS 생태계 확산)가 전통적인 교실 수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연구를 강화함
- ◎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스마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 교육 소외를 경험하는 사회적 소수자와 장애우, 학습부진아를 위한 맞춤형 스마트교육 프로그램 개발
- ◎ 스마트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재설계
 - 교육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개방교육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체제를 제도화해 학교 현장의 자료 접근성을 높임
 - '스마트 교수학습 센터'를 구축하여 교육자료 개발과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함
 - 에듀팟(Edupot)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보완할 수 있는 공교육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함

< 기대효과 >

- ◎ 스마트교육이 고차적 사고력(창의·통합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인 학습력, 협동협력학습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찾기와 처리능력 등) 개발 기여
- ◎ 국내외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기회 확대와 더불어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로 접근성 제고

전략 8.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 현실진단 >

- ◆ 일관된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절실함
- ◆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이 민주적 합의에 기초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증대함
- ◆ 교사/교수-학생-학부모 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주체들은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음

< 실천과제 >

- ◎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 교원(교사와 교수), 학부모, 학생,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함
 - 교육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정책으로 반영
 -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 개발과 대통령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등을 논의함
 - 교육행정의 민주화·현장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 교육 현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논의

< 기대효과 >

- ◎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교육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향을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음
- ◎ 교육주체 간 협력 체제와 활발한 소통 구조를 조성

주요내용

교육의 방향

개인의 능력과 적성이 실현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체제를 혁신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한다.

1.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공교육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이 창의성과 지속가능한 실력을 기르지 못한 공교육을 개선하여, 국가수준최소달성목표기준(국가책임최소기초학력달성)을 설정하여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목표성취여부만을 판정하는 평가체제를 갖추고,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직업/진로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과목 선택권과 학점제를 도입하며, 학교공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개별 맞춤형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중심의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질적 평가를 강화한다.

2. 고교와 대학의 서열화 및 차별 해소

고등학교 서열화에 따른 공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수평적 고교 선택제를 도입하여,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전후기 선발을 통합한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며, 대학의 서열화 및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거점대학, 혁신대학을 지정 육성하고, '차별금지법'과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불균등을 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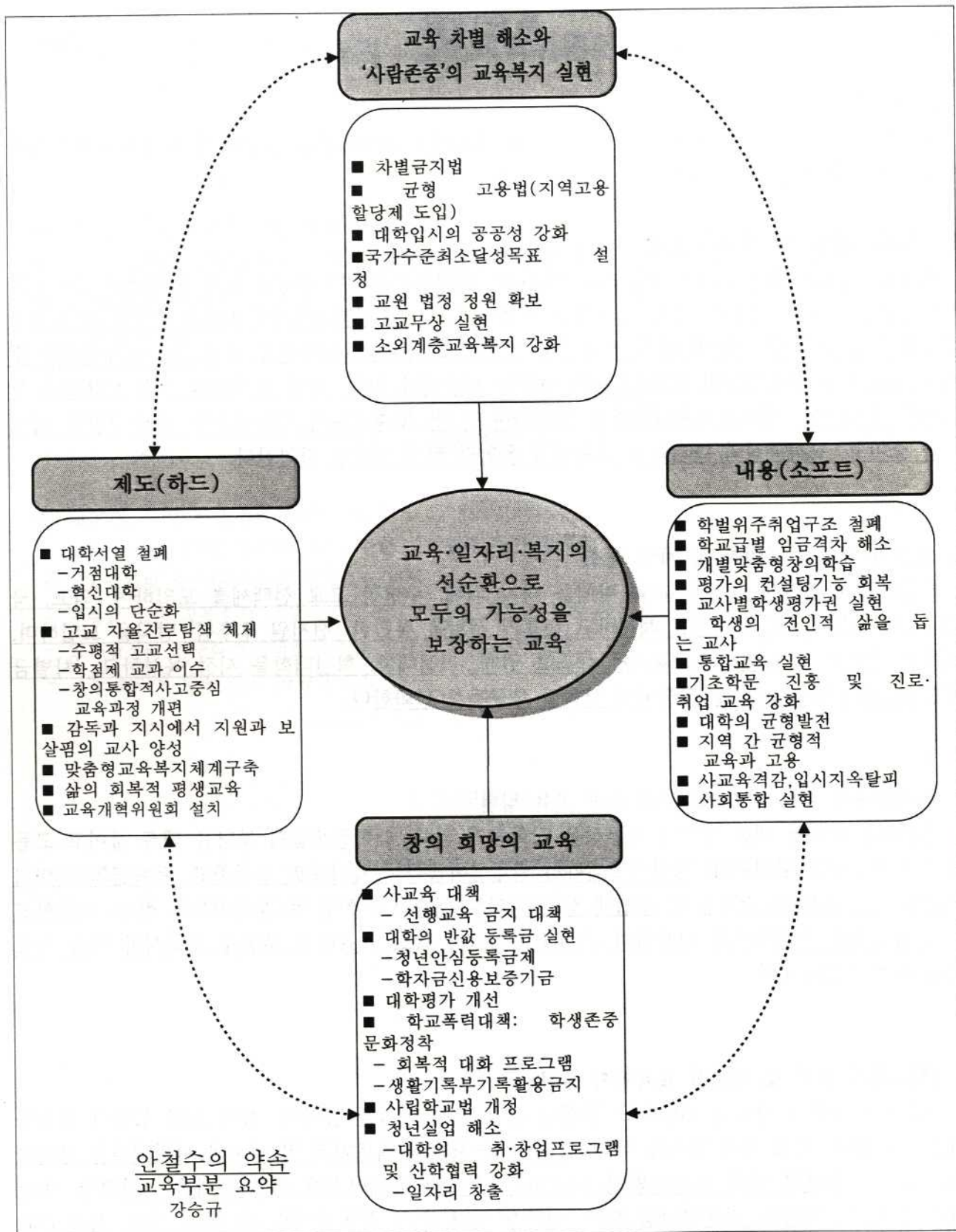
3.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및 고교 무상 교육 실현

공공재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등록금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 국공립대학의 반값등록금을 순차적으로 실현하고, 등록금의 나머지 부분도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장기 저리로 대출하고 취업 후 상환하도록 한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하며, 의무교육기간의 학교 교육비를 포함해 교과서와 학습 자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4. (학교폭력 방지 및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

청소년의 폭력과 자살을 예방하고 인권과 삶의 가치 의식을 높이며, 취약 소외 집단의 교육복지를 강화한다.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교-가정-사회의 네트워크 및 청소년 지원체제를 강화하며, '소통과 회복적 대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취약 소외집단(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빈곤층 자녀 등)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통합교육, 다문화 교육 관련 맞춤형 균형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의 대학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한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후보 교육공약



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으로 학벌체제 타파
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Upgrade)! 전문대,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4. 수능 폐지, 자격고사제 전환으로 입시경쟁 해결
5. 교육, 이제 상품이 아닌 권리로
6. 특목고 해체! 고교 평준화 재정립
7.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8.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질 높은 교육을
9. 학교자치! 작은 민주주의
10.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11.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
12.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

교육혁신! 꿈이 아닌 현실로!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걱정없는 사회,
학력·학벌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p>학벌사회 해체 - 국립대학 중심체제로 전환</p>	<p>교육비축소 - 반값등록금/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p>	<p>공교육 정상화 - 특목고 해체/ 일제고사 폐지</p>
<p>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으로 학벌체제 타파</p> <p>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Upgrade)! 전문대, 폴리테크 닉 체제로 전환</p> <p>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p> <p>4. 수능폐지, 자격고사제 전환 으로 입시경쟁 해결</p>	<p>5. 교육, 이제 상품이 아닌 권 리로</p> <p>-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 의무교육</p> <p>-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 정</p> <p>- 반값등록금 실현</p>	<p>6. 특목고 해체! 고교 평준화 재정립</p> <p>7.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p> <p>8.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질 높은 교육을</p> <p>9. 학교자치! 작은 민주주의</p> <p>10.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p> <p>11. 교원평가-성과급 폐기, 교 육-행정 업무 분리</p> <p>12.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 직으로 전환</p>

핵심공약

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으로 학벌체제 타파

-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으로 서열화·사교육 없는 공교육 구현
- ⇒ 지역 거점별로 특성화된 국립대집중 육성

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Upgrade)! 전문대,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 ⇒ 전문대학 국공립화, 정부지원 직업대학으로 개편
- ⇒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통폐합
- ⇒ 4년제 대학, 전문대학과 중복되는 학과 및 전공영역폐지, 폴리테크닉으로 이관
- ⇒ 교육환경개선 위한 재정지원 강화

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 ⇒ 대통령 직속 독립적인 심의기구로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 ⇒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4. 수능 폐지, 자격고사제 전환으로 입시경쟁 해결

- ⇒ 대학입시 경쟁에는 막대한 사교육비가 소요되고 대학입시를 매개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이 고착화
- ⇒ 경쟁 입시를 대학입학자격고사로 대체

5. 교육, 이제 상품이 아닌 권리로

- ⇒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의무교육
-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학에 대한 법적 운영경비 부담 의무화
- ⇒ 교육재정 확충으로 반값등록금 실현

6. 특목고 해체! 고교 평준화 재정립

- ⇒ 2013년도부터 특목고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하여 일반고로 전환
- ⇒ 자사고 설립을 중단하고 2013년부터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7.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 ⇒ 국가수준 및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 ⇒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 ⇒ 교육활동의 다양화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건 확충

8.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질 높은 교육을

- ⇒ 2015년까지 초등 20명, 중고등학교 25명으로 감축
- ⇒ 2020년까지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9. 학교자치! 작은 민주주의

- ⇒ 학생회 법제화, 민주적 학칙을 통한 학생권리 보장
- ⇒ 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교장선출보직제 도입

10.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 ⇒ 학생인권조례를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아동)인권법 제정
- ⇒ 교장의 책임 강화 및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문화 개선

11. 교원평가-성고급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

- ⇒ 교원평가 폐지, 교원성과급제 폐지,
- ⇒ 학급 담임 수당 현실화
- ⇒ 학교 조직체계 개편, 교육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치

12.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

- ⇒ 공공기관선진화정책 폐기
- ⇒ 교육감에게 교육공무직 임용권 부여
- ⇒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단계적 임용전환

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으로 학벌체제 타파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 과도한 사립대 의존형 고등교육 구조: (재적 학생 수 기준 국공립대 22%, 사립대 78%)

일반대 전일제 학생 비율(%)

	한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국공립	22	100	86	97	93	25	90	67	
정부지원사립			1	3					100
독립형사립	78		13		7	75	10	33	

* 출처: 2010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사실상 사립대학이 사기업이나 다름없는 성격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한 법제도 조건(사립학교법)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사립대는 부실·비리·부정·부패 경영과 이른바 '고액 등록금 장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고 재산을 축적
- 2009년 사립대학 학교회계 수입총액 중 등록금 비중 63.6%(일반대 62.9%, 산업대 74.4%, 전문대 65.0%)이고, 대학 설립 주체인 국가와 학교법인 부담은 각 3%에 불과함.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보유·수익률 등 법적기준치 미달인 상태. 등록금수입이 수입총액의 50% 미만인 대학은 소수에 불과(4년제대학 16.0%, 전문대 11.9%)
- 대학교육을 사립대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민간 자원 의존도가 OECD 평균의 2배, EU19 평균의 3배 이상.

■ 목표

- 대학서열화와 고질적인 학벌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상향평준화
- 수도권 인구과밀, 학생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전국 대학 균형발전(국가 균형발전계획과 연계)
- 공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는 국립대체제와 특성화된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학 체제로의 이원화

■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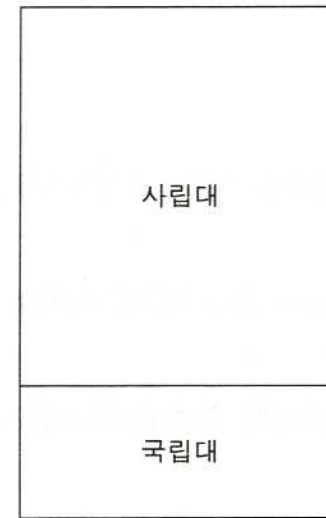
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으로 경쟁 패러다임에서 공공 패러다임으로!

-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이른바 '3통' 방안)로 운영되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전면 실시
- 엄격한 기준으로 부실 사립대 퇴출하여 국립대로 적극 편입 : 교수, 학생, 교직원 완전 승계
- 국립대(네트워크) 규모는 1단계 총 정원의 50%, 2단계 총 정원의 80% 수준(정부책임형 특성화 사립대 포함)으로 확대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등의 효과로 불필요한 대학진학 억제, 출생률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국립대 정원이 천천히 늘어도 총 정원의 점유율이 급속하게 늘게 됨
- 국립대가 포괄하지 못하는 특성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는 국가가 계속 지원
- 국립대 교과과정과 차별화되지 않는 사립대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국가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 과도기 기간 동안은 정부지원형 사립대 유지
- GDP대비 교육재정확대와 사립대 지원금의 국립대 전환을 통해 국립대 무상교육 지향

2. 지역 거점 국립대마다 특성화 계열 집중 육성!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시행 후에도 남아 있을 캠퍼스 별 서열체계를 제거하기 위해 각 지역 거점 별로 특정 계열을 집중 육성
- 각 지역의 집중육성 계열로의 인적·물적 자원의 집중은 질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연구자 간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 현재 인구와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지역 국립대(서울대 포함)는 비인기 순수기초학문 관련 계열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인기·응용학문 관련계열을 집중육성 대상으로 선정: 국토 균형발전 계획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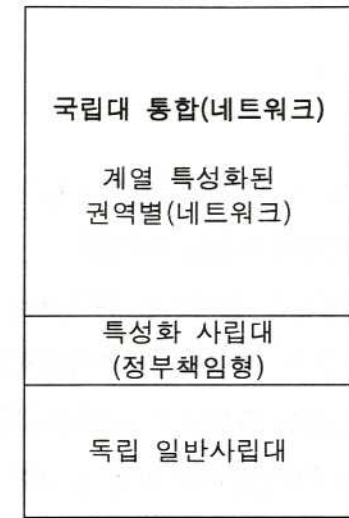
현 대학체제



대학체제
전면개편



대안대학체제



■ 재원

-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교육재정 확충
- ※ 재원관련 세부 내용은 무상교육 분야 참조

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Upgrade)! 전문대, 폴리테크닉 체제로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도 국공립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4,784명(전체 입학정원의 2.1%). 나머지 98%가 사립대학
- 사립전문대학 연간등록금은 600만원
- 일반대학이 취업률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전문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를 개설하기 시작하면서 전문대학 위상 급락, 서열화 된 대학체제의 최하위에 배치
- 전문대학졸업자들의 월임금의 중위값 150만원(서울소재 일반대학 졸업자 218만원, 비서울권 소재 일반대학졸업자 180만원) 등 차별 구조화

■ 목표

-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체제 수립
- 학벌, 임금차별 없는 전문 직업 인력 육성

■ 방법

- 전문대학 국공립화, 정부지원 직업대학으로 개편
- 전문대학, 폴리텍대학 통폐합 -> 폴리테크닉(2~4년) 체제로 전환
- 4년제 대학, 전문대학과 중복되는 학과 및 전공영역 폐지, 폴리테크닉으로 이관
- 국가의 적극적 개입 통해 임금격차 축소,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재정

년 도	2014	2015	2016
전문대학정원 25만 명	2조	2조	2조

*2011년 입학자 수 249,693명

*1인당 대학등록금지원액 400만원(전문대학평균등록금600만원-고등학교수준 등록금200만원)×25만 명= 1조원

*2개 학년 지원 : 2조원

(보론) 국립대 체제개편 로드맵

■ 사전 준비기(2013년)

- 국립대 관리·운영을 위한 국민위원회 설치
- 학생, 교직원,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와 시민배심제를 활용한 위원회 구성(국립대 교과과정, 발전방향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기구 설치)
- 준비기간 동안 국립대·사립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전면 실시(부실대학 제외)
- 학력학벌금지법 즉시 입법화, 문화적 조치와 병행하여 추진

■ 1차 대학 구조개편(2014년~2016년)

-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순차적 시행, 기존 재학생은 학위명 선택권 부여
- 국립대 입시
- 자격 인증제(절대평가)를 기반으로 계열별 구술면접, 논술고사 등(상대평가) 결합
- 자격 인증은 내신(절대평가)과 자격시험을 결합하고 점진적으로 상대평가 비율을 축소
- 거점별 집중 육성 계열 신입생 정원 점진적 확대. 해당 계열 실험·실습 기자재와 교수인력 등 순차적 결집. 특성화 계열부터 등록금 인하 추진
- 일정비율 이상의 야간강좌 개설로 노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대학이 담당하는 평생교육시스템 안착화
- 사립대에 대한 국가지원의 점진적 축소와 국립대에 대한 지원 점진적 확대, 부실 사학 퇴출과 국립대체제로의 흡수를 병행 추진: 총 정원의 50%이상

■ 2차 대학 구조개편(2017~2020)

- 일반 종합사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 대폭 축소, 자율권 부여
- 사립대와의 적극적 통폐합으로 국립대 정원 규모 대폭 확대: 정부 책임형 특성화 사립대를 포함하여 총 대학 정원의 80% 수준으로 확대
- 국립대 지원 증대로 완전 무상교육 실현

0 지역 계열 특성화 국립대학체제 구축 완료

0 탄력 정원제 실시: 자격고사, 적성상담 등을 통한 절대평가 전면 시행. 입학정원을 탄력화 함으로써 상대평가 동기 최소화

	준비기 (2012-2013)	1차 체제개편 (2014-2016)	2차 체제개편 (2017-2020)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국립대 통합전형, 통합학점, 통합학위 전면 시행 ·지역 거점 집중육성 계열 추진 ·국립대 정원 총 대학생·정원의 50%수준으로 확대	·지역 거점별 특성화 대학체제 구성 완료 ·통합전형에서 절대평가 전면 도입, 탄력정원제 운영 ·국립대 정원 총정원의 80%수준(정부책임형 사립대 포함)으로 확대 ·무상등록금 실현
사립대	·정부 지원형 사립대로 반값 등록금 실현 ·사학비리특별법으로 투명성 담보	·부실사립대 본격 퇴출 => 국립대 인수 착수	·특성화 사립대에 대한 정부지원 유지 ·비특성화대학 정부지원 중단, 자율성 보장
대국민	·국민교육위원회 설치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전면시행	·평생교육시스템 등 필요에 의한 대학진학 안착화

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 현황 및 문제점

- 0 시도 교육청(16개)과 시군구 교육청(180여개)은 비록 시군구 교육청이 최근에 명칭이 지원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위에 군림하는 행정기관
- 0 교육청의 중심 인력인 장학사들은 그 명칭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정처리 일꾼에 불과하며, 그 직책은 승진을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
- 0 반면, 교사(교수)-학생-학부모 등 교육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육주체들은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
- 0 또한 교육과 이해관계가 깊은 각계각층의 사회 세력들도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처지
- 0 국가교육의 미래는 국민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목표

- 0 전국 국립대 운영방향, 초·중등 교육과정 등을 논의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민 참여형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 방법

- 0 국가위원회의 위상
 -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
 - 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
- 0 구성
 - 교원(교사+교수), 학생(대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공익적 사회단체 추천인, 정부 추천인(교육전문가)으로 상임위원회 구성(25명 구성)
 - 비례추천표집 방법을 이용한 무작위 추출을 통한 국민 배심원단 형식의 위원 선발(100명 규모)
 - 일반위원(배심위원)은 1년에 1~2차례 소집되며, 상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최종심의·승인함
- 0 조직
 - 유초중등 위원회, 대학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
 - 교육청을 장학위원회와 학교지원센터로 재편

4. 수능 폐지, 자격고사제 전환으로 입시경쟁 해결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는 상위서열의 대학과 인기학과 진학을 위한 경쟁의 장으로서, 초·중등교육은 이러한 입시에 종속되어 영어, 수학, 국어 등 입시과목을 중심으로 파행적으로 운영
- 대학입시경쟁에는 막대한 사교육비가 동반되고 있으며, 대학입시를 매개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이 고착화

연도별 총 사교육비 현황(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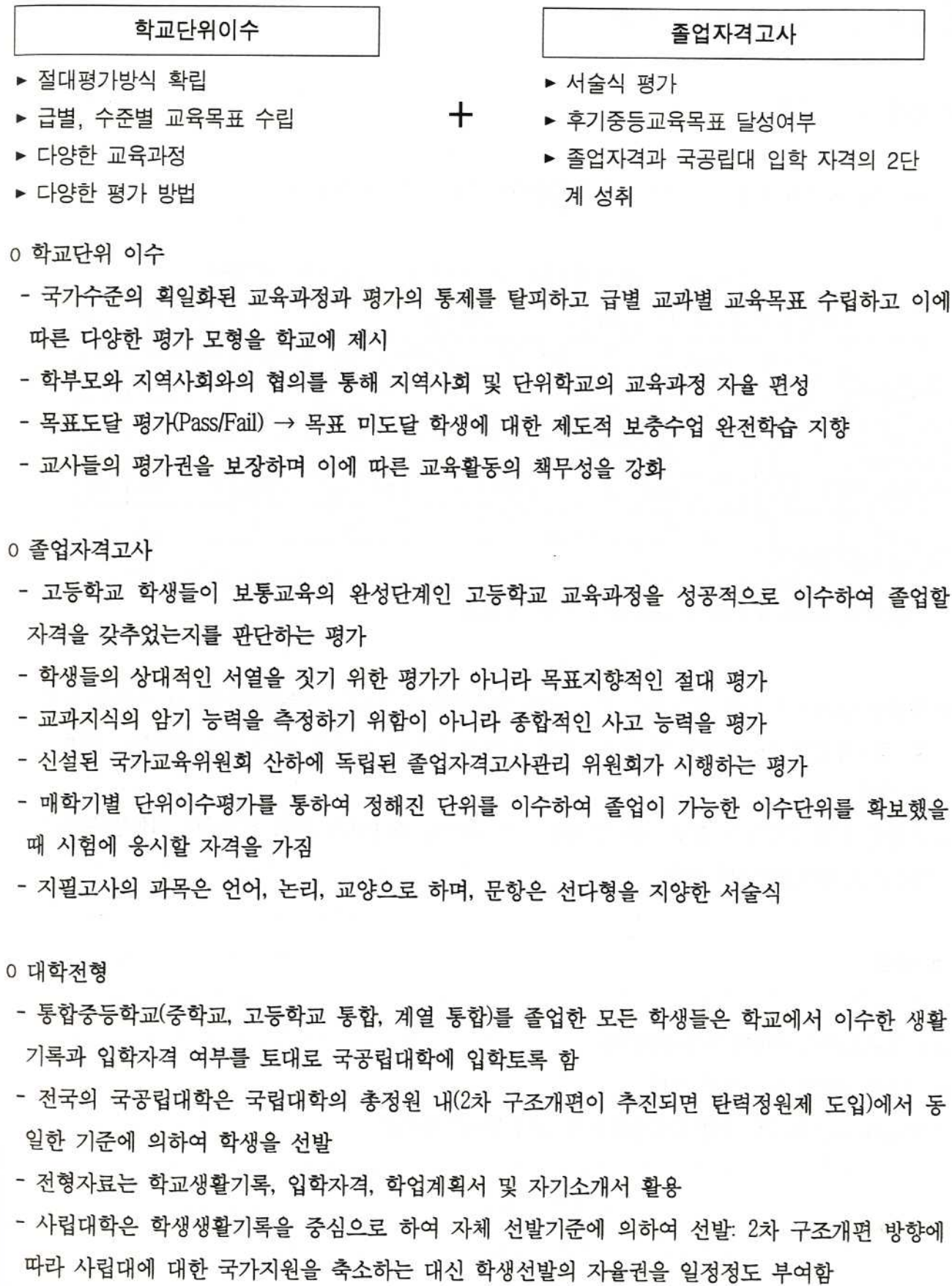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총 사교육비	200,400	209,095	216,259	208,718
실질 총 사교육비	180,703	178,257	179,022	167,645
(사교육관련물가지수, 2005년=100)	110.9	117.3	120.8	124.5

■ 목표

- 경쟁 입시를 자격고사로 대체
- 절대평가제로 인한 사교육 대폭 절감

■ 방법

- 대학통합(네트워크)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제·수준별 수능시험·대학별본고사 폐지, 대학입학자격고사(내신포함)로 전환(대입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자격 부여)



5. 교육, 이제 상품이 아닌 권리로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

재원 및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2007년)

	초·중등 및 중등후 비고등교육			고등교육			전체 교육단계		
	정부재원	민간재원	계	정부재원	민간재원	계	정부재원	민간재원	계
OECD평균	3.3	0.3	3.6	1.0	0.5	1.5	4.8	0.9	5.7
OECD전체	3.3	0.3	3.6	0.9	1.2	2.1	4.6	1.6	6.2
EU19평균	3.3	0.1	3.5	1.1	0.2	1.3	4.9	0.4	5.4
한국	3.1	0.8	4.0	0.6	1.9	2.4	4.2	2.8	7.0
핀란드	3.6	0.0	3.6	1.6	0.1	1.6	5.5	0.1	5.6

* 2010 OECD 교육통계

** 정부재원: 국제 재원의 직접적인 교육기관 지출금액과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가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포함됨

*** 민간재원: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순비용임.

○ 초중등 단계에서 민간 부담률은 GDP 0.8% 수준으로 약 8조원, 대부분 학부모의 손에서 직접 지출. 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급식비, 방과후 교육비, 각종 학교 체험활동 비용 등으로 구성

○ 대학의 민간 부담률은 GDP 1.9% 수준으로 약 19조원, 이중에서 12조 원가량이 대학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지출

■ 목표

○ 고등학교까지 전면적 무상의무교육

○ 사립대 반값등록금 즉시 시행

○ 국립대 재정회계법 저지! 반값등록금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 방법

○ 초·중·고등학교의 전면적인 무상의무교육

	내용	총액 (2008년 기준)	비고
초등학교 (사립제외)	학교급식비	약 9천억원	2008년에는 절반 가까이가 급식비로 추산되나, 최근에는 무상급식이 확산되면서 학부모 부담이 축소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로 방과후 활동 등이 확대됨에 따라 이 분야의 비용은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됨
	방과후 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	약 9천억원	
	계	1조 8천~9천억	
중학교	학교운영비	약 3천억	2011년 현재 강원, 경기, 경남, 전북, 광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학교 운영비 징수(약 3천억 정도)했으나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공립중학교 학교운영비 징수에 대해 위헌판결
	학교급식비	약 9천억원	
	방과후 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	약 3천억	
계	1조 5천억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약 2조	
	학교운영비	약 5,500억	
	학교급식비	약 9천억	
	방과후 교육활동비, 현장학습비, 학생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등	약 5,500억	
계	약 4조		
총계		약 7조 5천억	

○ 중앙정부의 예산을 기본으로 하고 지방 정부도 일정한 교육비 지원을 담당

- 일시에 전면적인 무상의무교육 실시가 어려울 경우, 정확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전면적인 무상의무교육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

- 우선순위: 초등부터(낮은 급별 우선), 학교급식비나 등록금부터(필수교육비 우선), 농어촌 지역부터(어려운 지역 우선), 전문계고부터(어려운 계층 우선) 무상의무교육을 확산

○ 국립대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재정회계법 폐기 : 현재 교과부에서는 불법으로 판결된 기성회비를 수업료와 통합하여 합법화하려는 국립대재정회계법을 추진 중

- 수업료의 경우 기존 국립대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의 50% 미만으로만 인상하도록 할 것

- 국립대 등록금은 즉각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이후 무상교육 추진

0 사립대

- 반값등록금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교육재정 확충으로 충당

입법과제

1.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내국세의 10%로 고등교육 재원 마련.
- 학생 등록금 1/2 이상을 학교와 학생에 교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교부 기준 등을 마련.
- 법인분담금 미납대학, 교원확보율, 사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준칙 등 교부금의 교부 제한 기준 설정.

2. 고등교육법 개정

- 교원확보율의 기준을 법제화 함. 단계적으로 교원확보율을 맞추게 함.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 법인전입금 강제. 미납시 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 가능.

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법인전입금 강제. 미납시 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 가능.

5. 사립학교법 개정안 <2008. 12. 상정>

-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을 규제하며, 그 사용내역과 사용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재원(고등교육 부문)

0 정부 재정 지원 확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으로 해결 가능.

-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조세를 제외한 내국세 8%-10%를 교부금으로 지원할 경우.

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추정

(단위: 십억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내국세	179,438	194,303	209,653	222,574	239,489
교부세율	8.0%	8.5%	9.0%	9.5%	10%
교부액	14,355	16,516	18,869	21,145	23,949

* 참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내국세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사용하고, 2017년도의 내국세액은 '12~'16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0 법인전입금 확충 의무화

법정부담금 추계액

(단위: 억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법정부담금	3,877	4,207	4,564	4,952	5,373
부족액	2,326	2,524	2,738	2,971	3,224

주1) 법정부담금: 2005~2009년 법정부담금 연평균 증가율 8.5% 적용 추계

주2) 부족액: 법정부담금의 60% (2005~2009년 평균 법정부담금 부족률 57.7%)

- 최근 5년간 교·직원 법정부담금의 법정부담금 전입 부족률이 57.7%. 교·직원 법정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학교회계에서 지출.
- 법정부담금만 제대로 확충해도 5년간 1조 4천억 원 교육재정 확충.
- 사립대학에 법적 운영 경비 부담 의무화: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정해진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법적인 기준만큼 학교에 내고 있지도 않음.
- 법에 규정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와 그에 따른 수익을 학교가 사용케 하여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재단에 공공적 책임성을 강조함.

6. 특목고 해체! 고교 평준화 재정립

■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공약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설립(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자율형사립고 49개 서울지역에 27개교 설립)

<특목고 자사고 상황 (2011년)>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	계
자사고	27	2	3	4	2	2	2		1	2		2	1		1		49
외고	6	8		1	1	2		1		1	2	2	1	1		1	27
국제고	1	1				1		1									4
과학고	3	2	1	1	1	2	1	1	1	2	1	1	1	1	1	1	22

- 특목고 특히 외고의 경우 어학영재 양성이라는 설립목적과 상관없이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 상위 서열 대학의 진학 통로 역할 수행
- 자율형사립고는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 3배의 등록금이 소요되는 상류층의 학교
- 외고와 자율형사립고는 등록금 600~1,000만 원대의 일반학교와 구별되는 상류층학교로 사회적 위화감 조성
-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평준화지역에 비해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저하, 비선호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열패감 심화와 자존감 상실 등의 반교육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목표

- 상위서열대학 진학의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외고와 자사고 중심의 '계층분리학교체제' 를 고교 평준화체제로 대체
-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고교평준화 확대를 통하여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초·중학교교육 과정을 정상화하며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
- 학교를 선호-비선호학교로 구분하여 학교서열화를 낳는 학교선택제 폐지(통학거리에 따른 학교 진학)

- 지역별 학교 간 격차 해소, 고교의 균형발전 도모

■ 방법

- 2013년도부터 특목고(외고, 국제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일반고로 전환
- 자사고 설립을 중단하고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2013년부터 기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7. 일제고사 폐지! 교육과정 전면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오로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상대평가제 유지: 일제고사로 초등학생까지 점수 경쟁
- 과도한 학습량과 난이도로 대별되는, 발달단계를 무시한 주먹구구식 교육과정 편성, 교과별 이해 관계의 침해한 대립을 조장하는 비민주적, 힘겨루기식 교육과정 개편 등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으로 강행된 2009교육과정을 중단해야 함
- 주5일제 전면시행의 책임을 가정과 학교에 전가: 경제적 여건과 지역 여건에 따라 주5일제에서도 양극화 현상 우려, 현행 입시체제로 인한 주말 사교육 확대 및 학교 보충, 자율학습 확대 등이 예상

■ 목표

- 일제고사 폐지, 국가수준 및 시도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집 시행 금지
- 내신 석차 백분율을 폐지하고 절대평가제로 전환, 교사별 평가제 도입
- 선진국 수준으로 학생의 주당 수업시수 감축 및 연간 수업일수 축소
- 2009 개정 교육과정 폐지하고 교육과정 전면 개정

■ 방법

- 교육과정 전면개정을 위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 민주적 논의절차를 통해 교육과정 발전방향 수립. 과거의 교육과정과 입시에 의한 왜곡을 거울삼아 “누구나 함께 발달할 수 있는 협력교육과정, 수업시수 감축과 학습량 적정화, 수준별 반편성 금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과 평가권 부여”를 기본 방향으로 함.
- 교육활동의 다양화와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여건 확충
 - 학급당 인원수 감축, 교사1인당 수업시수 감축,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운영구조 전환

8.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질 높은 교육을

■ 현황 및 문제점

-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 수 (2009)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계)
한국	28.6	35.1	35.9
OECD 평균	21.4	23.7	통계 없음

출처 : '2011 OECD Education at a Glance)

- 학급당 학생 수가 많으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익명화되며, 다양한 수업 방법을 구사할 수 없음: 학생 개개인의 성장 속도에 맞는 맞춤형 교육 불가능
-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조건(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 출산율 감소로 초·중등 학생들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따라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음. 그러나 현 정부는 오히려 학급수를 줄이려 시도

■ 목표

- 1단계 : 2015년까지 초등-20명, 중고등학교 25명으로 감축
- 2단계 : 2020년까지 모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감축

■ 방법

2015년 증설학급수와 교원증원 예상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예상인구수(2015)	2711536	1523145	1878317
예상취학생수(2015)	2666815	1499994	1791097
예상학급수(초등 20명, 중고등25명 기준)	133340	59999	71643
증설학급수	9407	1626	13461

증원교원수(초등: 학급수x1.5/ 중학교 학급수x1.8/고등학교 학급수x2.0)	14111	2928	26923
연간 증원교사수(2013~15. 3년 평균)	4703	976	8974

- 2015년에 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고, 중·고등학교를 25명으로 하였을 경우 초·중·고 모두 약 25000여 학급을 증설해야 하며, 교사 정원은 약 4만 4천명도를 늘려야 함
- 학급수의 경우 현재 초·중·고 총 24만여 학급이기 때문에 약 10%의 학급이 늘어나는 것
- 학교를 신설하거나 기존 교실공간 규모를 축소하여 학급교실 확보

2020년 증설학급수와 교원증원 예상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상인구수(2020)		1321129	1418802
예상취학생수(2020)		1301048	1352920
예상학급수(20명 기준)		65052	67646
증설학급수		5052	-3997
증원교원수		9094	-7995

- 2020년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학생 수 변화 거의 없음(2015년도 수준 유지)
- 중학교는 5000여개의 학급 수 증설과 10000여명의 교원증원이 필요
-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급속하게 감소하여 4000여개의 학급이 감소하고 교사정원도 8000여명 정도가 감소(불과 2000여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재정은 거의 필요 없음)

9. 학교자치! 작은 민주주의

■ 현황 및 문제점

- 여전히 한국의 학교를 지배하는 것은 관료와 사학 자본. 교육의 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는 교육정책의 결정에서부터 학교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대상화
-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에 교사-학부모-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독선적인 교장 권력을 견제하기에도 버거운 실정
- 자율성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 자발성과 책임성이 존재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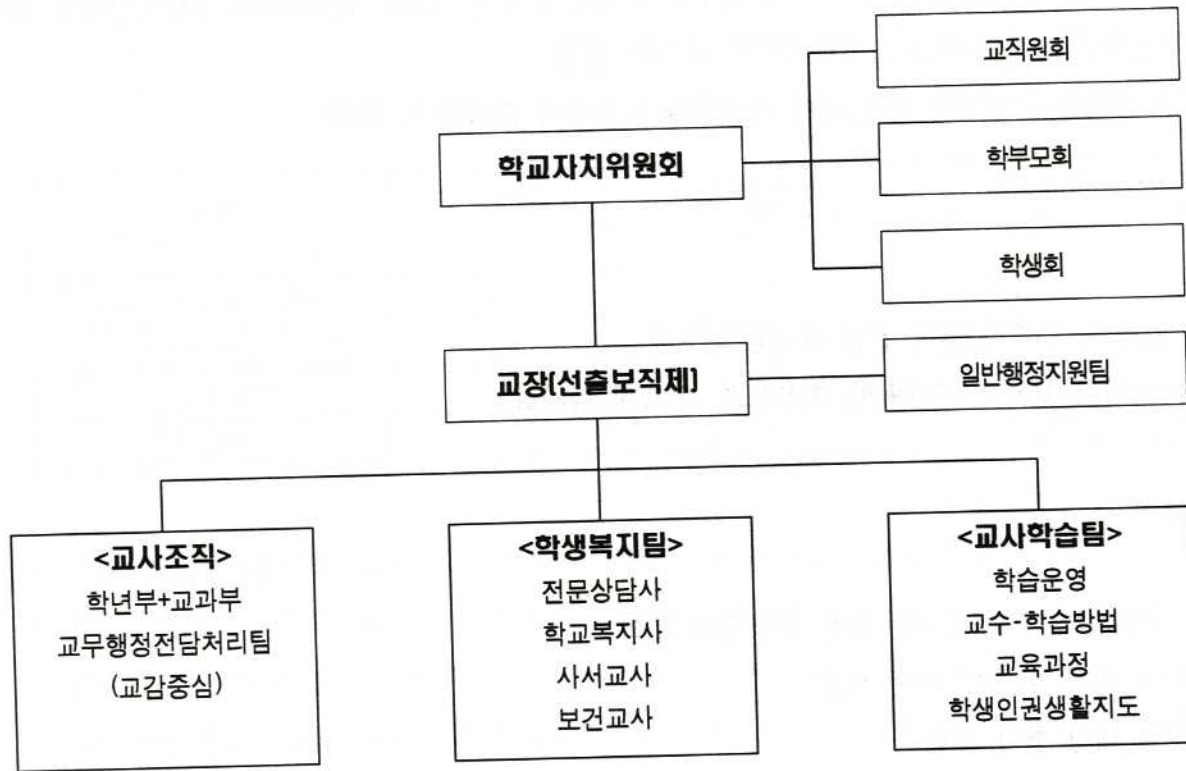
■ 목표

- 학생회 법제화, 민주적 학칙 통한 학생권리 보장
-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 방법

- 학생회 법제화, 민주적 학칙을 통한 학생권리 보장
 - 집회, 결사, 출판, 표현의 자유 보장
 -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 보장
 - 학생관련 규정에 대한 의결권 부여
 - 학생회장 선출 직선제 전면화, 학생회비 예산편성권·집행권 보장
-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 교직원회: 학교 혁신, 교육과정, 인사, 예·결산, 학교장 선출, 교육활동 등의 분야에 대한 의결권 부여
 - 학부모회: 학교운영,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 평가, 견제 역할 부여
 - 학생회: 학교운영, 학칙제정, 학교복지에 대한 의결권 부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교무회의 참관
-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 교장 자격 : 일정한 교직 경력을 지닌 현직 교사 (교장자격증제 폐지)
- 선출 방식 : 교직원회의에서 복수 추천(교황식) → 교사, 학부모, 학생 대표단에서 선출 →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 교장 역할 : 교직원회의 주재, 학생회와 학부모회 지원, 학교내외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및 관리(학교의 행정 및 재정 관리), 교원의 공동학습연수 등 지원



10.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 현황 및 문제점

- 초등 5, 6학년, 중등 1, 2학년은 학교폭력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기간
- 최근 학교폭력은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연령이 낮아지고, 집단화, 조직화되는 등 점차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활동은 미흡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05년 2,518건, 2008년 8,813건, 2009년 5,605건, 2010년 7,823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의 원인은 학생의 개인적 심성 때문이라기보다 사회적 양극화, 가족해체, 인터넷과 대중문화의 영향, 붕괴된 교육환경, 교실 내 권력관계 등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함
-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 역시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경찰과 외부 인력의 개입보다 교육적 관점에서 학교 자체의 해결능력과 전문성을 지원하는 행정체제 마련이 필요함
-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이 또 다른 학생 간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등 학생 간 폭력 생태계가 악순환되고 있고 의도성, 반복성, 체계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많음

■ 목표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안전망 구축
-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
- 학교 자체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마련

■ 방법

- 학생인권조례를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아동)인권법 제정
 - 학생의 사회책임(돌봄), 건강권, 학습권, 복지권, 자치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법 제정
 - 국제기준, 헌법,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학교의 비인권적인 학생생활지도 규정 개정
 - 두발단속금지, 체벌금지, 차별금지 등 교사·학생 관계 회복 운동 전개
 - 폭력과 차별에 맞서는 개인 및 학생집단의 해결능력 및 공동체 생활교육 활성화

- 인권침해 가해·피해학생, 교사를 위한 교육 및 치유시설센터 구축
 - 가해학생 지도와 교육을 위한 교육청별 위탁교육, 대안교육시설 확충
 -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One-stop 지원센터 구축
 - 학생, 교사, 학부모의 심리적·정신적 치유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 마련

- 교장의 책임 강화 및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문화 개선
 - 인권침해 관련 학교장의 가해자·피해자 및 학부모 조사권·면담권 의무화
 - 학년별 담임업무체제 구축(담임교사-수업 및 상담 전담, 업무경감)
 - 인권침해 관련 동학년협의회, 교사회의, 학생회의, 학부모회의 상설화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개정
 - 징벌적 지도에 앞선 회복적 학생생활지도 과정의 의무화
 - 출석정지 및 징벌적 처벌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생활기록부 기록 등 인권침해적인 누적 기록 방식 폐기
 -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지도 관련 학교장 책임 강화
 - 학교단위의 가해학생처리 남용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징계결정에 대한 심사)

II. 교원평가-성급금 폐기, 교육-행정업무 분리

■ 현황 및 문제점

- 현 정부 하에 학교평가와 교원평가가 강화되고 이를 근거로 차별적인 보상제도(교원성과급)가 확대됨
- 경쟁만능주의와 교사의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평가지표는 교육 주체 간의 불신만 초래하며 불필요한 잡무만 양상하고 있음: 9개월 동안 무려 6천여 건의 공문 생산. 행정능력이 증시 되는 형국

공문 처리 현황 (서울의 한 고등학교학교 사례, 2011. 1.1~9.31)

공문접수 건수	내부 공문생산 건수	외부 발송 건수	총계
5525	5871	685	12081

■ 목표

- 일방적 경쟁중심의 평가 폐지
- 교육-행정업무 분리

■ 방법

- 교원평가 폐지
- 교원성과급제를 폐지, 학급 담임 수당 현실화(30~50만원)
- 학교 조직 체계를 교육중심으로 재편, 교육행정업무 전담인력 배치

12.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비정규직은 학교장이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형태로 고용되어 항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구조에 노출되어 있음
- 전국 초·중등 교육기관에 10만 명 이상의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급식, 행정, 전산, 방과후, 행정 보조 등의 다양한 업무로 학교운영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총 교육기관 종사자의 20%에 달함
- 학교라는 가장 공공적인 기관부터 사회적 차별의 표상인 비정규직 제도를 통해 운영된다는 것은 교육과 정의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못한 것임
-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특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학교비정규직을 교육현장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 목표

- 학교비정규직에 대하여 교육공무직으로 정규직화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차별적 관행을 타파하여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차단함

■ 방법

-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즉각 폐기 -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가 '선진화'로 포장될 수 없으며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없애는 모범을 보여야 함
- 교육감이 학교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을 직접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예 : 법원의 경우 법원 공무원규칙에 각급 법원장이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
- 각 시·도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근무 실태와 고용조건을 조사하고 교육공무직으로의 임용전환 계획과 예산을 작성, 그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임용전환을 실시(목표율 70%)하고 전환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부문도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통령후보 교육공약

등수 없는 협동교육에서 학벌사회 해소까지 교육혁명 5대 공약

-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전환 -
- 사교육 폐지! 대입자격고사 전환과 4대 긴급조치 실시 -
- 5+5+5조원 재정투입! 대학통합 네트워크 5조, 반값등록금 5조 신규 투입-
- 혁신학교 전국화 및 학생인권법 제정 -
- 학벌·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성장한 시민으로서, 일찍이 교육자의 꿈을 꾸며 사범대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내일모래 수능시험을 보는 아들의 엄마로서 우리 교육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적비관으로 자살하고, 사교육비 마련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등록금 때문에 알바를 전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우리 교육으로는 이 사회가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회양극화와 빈부세습을 만드는 지금의 교육 시스템을 놓아두고는 경제민주화도 복지국가도 먼 과제일 뿐입니다.

교육개혁은 몇 가지 제도 개선으로 이룰 수 없음이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어른들의 교육 기득권으로 복잡하게 꼬인 미로를 빠져 나가는 길은 '아이들 살리기'라는 단 하나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폐단인 학벌사회라는 거대한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들께서 교육개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실정의 공동정범인 박근혜 후보에게서는 진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일제고사 부활과 고등학교 서열화에 대한 침묵을 통해 아이들과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조차 못한다는 것이